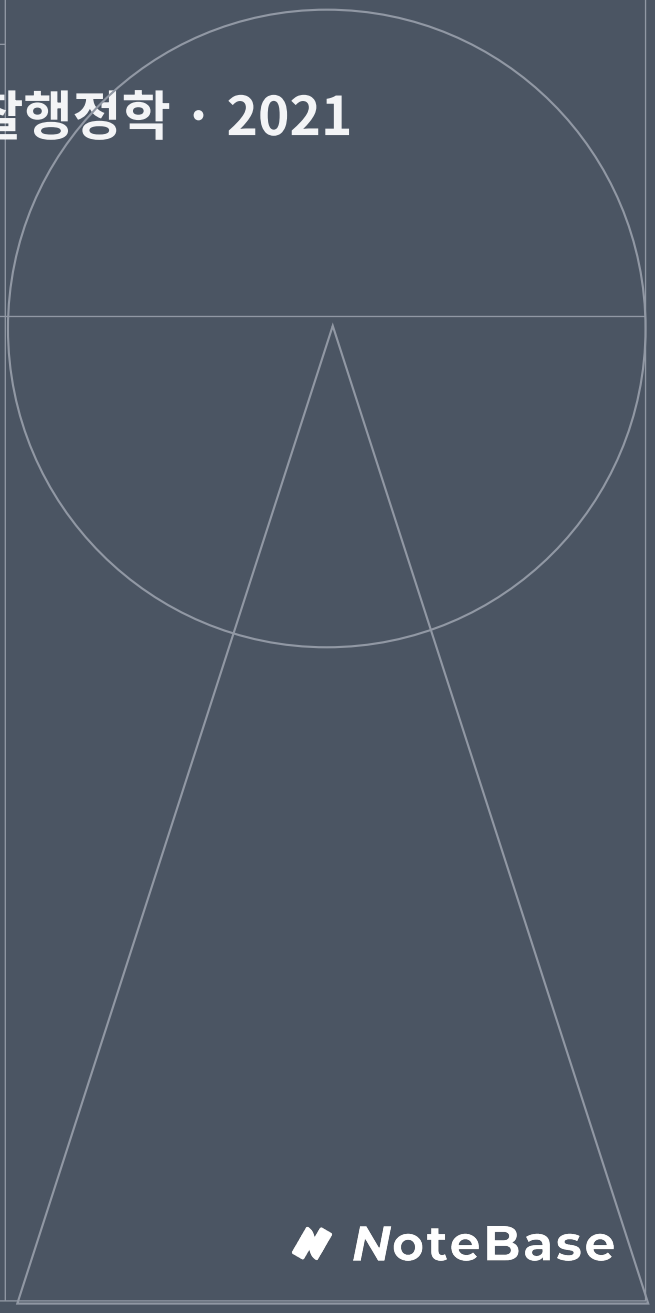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승진시험 · 경찰행정학 · 2021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승진시험 · 경찰행정학 · 2021

공무원/경찰/승진시험 · 경찰행정학 · 2021

문 1.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포스트모더니티(Postmodernity)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거대설화(meta narratives)에 대한 믿음을 견지한다.

② 탈영역화(deterritorialization)와 해체(deconstruction)를 추구한다.

③ 상상(imagination)을 중시한다.

④ 다양성을 선호하고 타인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갖는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포스트모더니티는 사회 전체를 하나의 보편적 원리로 설명하려는 **거대설화에 대한 불신**을 특징으로 한다. 거대설화를 확고히 믿기보다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인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거대설화'는 이성이나 진보 등 하나의 보편적 원리로 사회와 역사를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정당화하려는 이야기이다. 포스트모더니티는 이러한 설명이 다양한 경험과 차이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고 보고 **거대설화에 대한 믿음을 의심한다**. 따라서 거대설화에 대한 믿음을 견지한다는 설명은 포스트모더니티의 입장과 반대이다.

② O: '탈영역화'는 학문과 지식을 나누는 **고정된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뜻한다. '해체'는 기존 언어와 이론을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안에 깔린 전제와 의미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둘 다 기존의 지식 체계와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다시 살피려는 포스트모더니티의 특징이다.

③ O: 포스트모더니티는 합리적 분석만으로 행정의 다양한 상황과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상상을 통한 새로운 해석과 대안**을 중시한다. 이는 이성을 완전히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합리화 중심의 사고가 제한했던 창의적 가능성을 열어 보려는 것이다.

④ O: 포스트모더니티는 하나의 보편적 기준으로 사람들의 경험과 가치를 획일화하는 데 비판적이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관점과 삶을 인정하는 **타인에 대한 개방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며, 이러한 태도를 '타자성'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NoteBase

문 2. 다음의 분류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특 성		경합성 여부	
		경합성	비경합성
배제성 여부	배제성	㉠	㉡
	비배제성	㉢	㉣

① ㉠ : 시장재 (Private Goods) — 자동차, 냉장고

② ㉡ : 요금재 (Toll Goods) — 인터넷 서비스, 상하수도

③ ㉢ : 공유재 (Common Goods) — 등대, 목초지

④ ㉣ : 공공재 (Public Goods) — 치안, 국방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등대는 특정 선박의 이용을 막기 어렵고 한 선박이 이용해도 다른 선박이 누릴 편익이 줄지 않는 **공공재**이다.
따라서 비배제적이면서 경합적인 공유재의 예시로 등대를 연결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표의 행은 배제성 여부, 열은 경합성 여부를 나타낸다. 배제성은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의 이용을 막을 수 있는 성질이고, 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몫을 줄이는 성질이다.

① O: ㉠은 **배제성과 경합성**이 함께 있는 시장재이다. 자동차와 냉장고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의 좌석이나 냉장고의 저장 공간을 한 사람이 이용하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므로 경합성이 있다.

② O: ㉡은 배제성이 있지만 비경합적인 요금재이다. 인터넷 서비스와 상하수도 시설의 서비스는 요금 납부 여부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시설의 공급 능력에 여유가 있는 범위**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요금재로 분류한다. 혼잡하거나 공급 한계에 이르면 경합성이 나타날 수 있다.

③ X: ㉢은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진 공유재이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목초지는 이용자를 배제하기 어렵고, 한 사람의 가축이 풀을 먹으면 다른 사람이 이용할 풀이 줄어든다. 그러나 등대의 빛은 특정 선박만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 어렵고, 한 선박이 이용해도 다른 선박의 이용 가능성이 줄지 않는다. 따라서 등대는 **공유재가 아니라 ㉣의 공공재**에 해당한다.

④ O: ㉣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이다. 치안과 국방은 일단 제공되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 주민만 보호 혜택에서 제외하기 어렵다. 또한 한 사람이 보호 혜택을 추가로 누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누리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공공재의 예시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3. 정치·행정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윌슨(W. Wilson)은 「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 1887)」라는 논문에서 정치와 행정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② 윌슨은 행정의 영역을 전문적(專門的)·기술적(技術的) 영역으로 인식한다.

③ 굿노우(F. Goodnow)도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주장하였다.

④ 능률적인 행정을 위하여 정당정치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을 **정당정치의 개입에서 분리**하여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이려는 입장이다. 따라서 능률을 위해 정당정치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다는 설명은 이론의 취지에 반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윌슨은 1887년 「행정의 연구」에서 정치와 행정의 기능을 구별하였다. 정치는 행정이 수행할 과제를 정하되, 구체적인 행정 운영은 **정당정치의 간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② O: 윌슨은 행정을 정해진 정책과 법률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전문적·기술적 영역**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행정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 지식과 훈련을 중시하였다.

③ O: 굿노우는 정치를 **국가 의사의 표현**, 행정을 **국가 의사의 집행**으로 구분하였다. 즉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과 결정된 정책을 실행하는 기능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④ X: 정치·행정이원론은 능률적인 행정을 위해 **정당정치의 개입을 억제**하고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당정치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다는 부분은 그 취지와 반대이다.

NoteBase

문 4.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치와 행정 현상을 경제학적 방법론으로 분석한다.

② 니스카넨(W. Niskanen)은 “관료는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라고 주장하였다.

③ 사이몬(H. Simon)의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기초로 하고 있다.

④ 방법론적 개체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 입장을 취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공공선택이론의 기본 전제는 개인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경제인이라는 것이다. 정보와 인지능력의 제약 때문에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한다는 사이몬의 **제한적 합리성**을 그 기초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공공선택이론은 정치·행정 영역의 의사결정을 **경제학의 합리적 선택 모형**으로 분석한다. 유권자·정치인·관료도 각자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보고, 제도와 유인이 이들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② O: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은 관료가 **소속 부처의 예산을 극대화**하려 한다고 본다. 예산 규모가 커지면 관료의 권한·위신 등 개인적 효용도 커질 수 있으므로, 예산 확대를 추구할 유인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③ X: 공공선택이론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경제인**을 전제한다. 사이몬의 제한적 합리성은 정보와 인지능력의 한계로 모든 대안을 완전하게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적 대안보다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공공선택이론이 사이몬의 제한적 합리성을 기초로 한다는 연결이 부적절하다.

④ O: 방법론적 개체주의는 집단의 행동과 사회현상을 **개인의 선택과 상호작용**에서 출발하여 설명하는 입장이다. 공공선택이론도 정부나 사회를 독립적인 하나의 의사결정자로 보기보다, 유권자·정치인·관료 등 개인의 선택을 기본 분석 단위로 삼는다.

NoteBase

문 5. 행정학의 주요 패러다임과 그 내용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학적 관리론 - 시간 및 동작연구를 통한 '유일 최선의 방법(a single best method)' 발견

② 행정행태론 - 가치지향적 관리 강조

③ 인간관계론 - 생산성 향상에 대한 사회적·심리적 요인의 중요성 인식

④ 행정생태론 - 문화적·환경적 차이에 따른 행정의 특수성 파악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행정행태론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행정 현상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가치중립적 연구**를 중시한다. 따라서 '가치지향적 관리 강조'라는 연결은 행정행태론의 특징과 맞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과학적 관리론은 작업을 세분하여 소요 시간과 동작을 측정하고 불필요한 동작을 줄여 **가장 효율적인 작업 방법**을 찾는다. 시간 및 동작연구를 통해 '유일 최선의 방법'을 발견하고 이를 표준화하려는 접근이다.

② X: 행정행태론은 인간의 행태와 의사결정 과정을 관찰·검증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가치판단과 사실판단을 구분하는 **가치중립적 연구**를 강조하므로, '가치지향적 관리 강조'라는 연결은 맞지 않는다.

③ O: 인간관계론은 근로자를 사회적 욕구를 가진 존재로 보고 집단 내 관계, 사기, 비공식조직 등의 **사회적·심리적 요인**이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물리적 작업조건이나 경제적 보상만으로 생산성을 설명하지 않는다.

④ O: 행정생태론은 행정과 그것을 둘러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의 상호관계를 연구한다. 국가나 사회의 **환경이 다르면 행정제도와 행태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므로, 문화적·환경적 차이에 따른 행정의 특수성을 파악한다.

NoteBase

문 6.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종하기보다는 봉사한다(Serve rather than steer).

②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이다(The public interest is the aim, not the by-product).

③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한다(Think democratically, act strategically).

④ 고객이 아니라 시민에게 봉사한다(Serve citizens, not customers).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한다'는 두 수식어의 위치가 바뀐 표현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는 원리를 제시한다.

선지별 해설

신공공서비스론은 민주적 시민의식과 공익을 중시하며, 정부가 시민과 협력하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① O: 신공공서비스론에서 정부는 사회를 일방적으로 이끌기보다 **시민이 공동의 이익을 표현하고 실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공무원은 시민과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시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② O: 공익은 개인들이 사익을 추구한 결과 저절로 생기는 부산물이 아니라, 시민의 대화와 숙의를 통해 함께 형성하고 추구할 **행정의 목표**이다. 정부는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익과 책임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③ X: 올바른 원리는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Think strategically, act democratically)이다. 공공의 필요를 충족할 목표와 실현 방안을 전략적으로 구상하되, 정책의 설계와 집행에는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보장해야 한다. 선지는 '전략적으로'와 '민주적으로'를 서로 바꾸어 제시했다.

④ O: 시민은 서비스를 소비하는 고객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와 책임의 주체**이다. 따라서 행정은 개별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과 신뢰·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NoteBase

문 7. 울프(C. Wolf, Jr.)가 주장한 정부실패의 유형 중 내부성(Internalities)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투표의 역설
② 최신기술에 집착
③ 정보와 지식의 독점
④ 더 많은 예산의 확보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투표의 역설은 다수결에서 **집단의 선호가 순환할 수 있는 문제**이다. 공익보다 조직 내부의 목표를 앞세우는 내부성과는 구별된다.

개념 구분

울프의 내부성은 정부조직이 사회 전체의 편익보다 **조직 내부의 목표와 이익**을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아 비효율을 낳는 현상이다. 정부활동의 최종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경쟁에 의한 통제가 약하면, 예산이나 기술 수준 같은 내부 기준이 공익을 대신할 수 있다.

투표의 역설: 개인별 선호가 일관되어도 다수결로 집계한 집단의 선호는 순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단이 A보다 B를, B보다 C를 선호하면서도 C보다 A를 선호하면 안정적인 최선의 대안을 정하기 어렵다. 이는 **개인의 선호를 집단의 선택으로 모으는 과정**의 문제로, 정부조직이 내부 목표를 추구하는 내부성과 구별된다.

최신기술에 집착: 실제 필요성과 비용 대비 효과보다 **새롭고 복잡한 기술의 도입 자체**를 성과로 여기는 경우이다. 기술의 고도화가 조직 내부의 목표가 되어 불필요한 비용을 늘릴 수 있으므로 내부성에 해당한다.

정보와 지식의 독점: 정보의 수집·통제를 통해 **조직의 영향력과 권한을 유지·확대**하려는 경우이다. 공익에 필요한 정보 활용보다 조직만의 정보 보유를 중시하므로 내부성에 해당한다.

더 많은 예산의 확보: 공공서비스의 성과보다 **예산 규모의 확대 자체**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이다. 필요한 수준을 넘어 예산과 조직을 키우려는 목표가 자원 배분을 왜곡하므로 내부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내부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투표의 역설'인 ①이다.

NoteBase

문 8. 롤스(J. Rawls)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의를 공평(fairness)으로 인식하였다.

② 불평등한 분배가 정당화되려면 최소 수혜자 집단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순수한 절차적 정의가 보장되는 원초 상태(original position)에서 합의된 일련의 원칙이 곧 사회 정의의 원칙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④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의한 성과는 사회공동의 자산이 아닌 개인의 소유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롤스는 재능과 노력에 따른 성과를 **오직 개인의 몫으로만 정당화하지 않는다**. 타고난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보고, 그로 인한 이익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사회 제도를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① O: 롤스의 정의론은 '공평으로서의 정의' 또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이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한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의 기본 제도를 구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② O: '차등의 원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등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가능한 제도들을 비교하여 가장 불리한 사람들의 처지를 가장 좋게 만드는 분배를 선택한다. 최소 수혜자가 다른 모든 집단보다 더 많은 몫을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③ O: 원초 상태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재능 등을 모르는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가상적 상황이다. 누구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원칙을 정할 수 없는 공정한 조건을 마련하고, **그 절차에서 합의된 원칙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순수한 절차적 정의를 적용한다.

④ X: 롤스는 타고난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보며, 노력할 능력과 기회도 가정·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재능과 노력의 성과가 오직 개인에게만 귀속되어야 한다고 정당화하지 않으며, 그 성과로 생기는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이는 재능 자체의 공동 소유나 모든 성과의 균등 분배를 뜻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9. 바흐라흐와 바라츠(Bachrach & Baratz)의 무의사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엘리트 이론을 비판하고 다원주의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창되었다.

②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존에 누리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또는 새로운 혜택을 제시하여 이들을 매수한다.

③ 편익과 특권의 불공정한 배분을 시정하기 위해 대두되었다.

④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기존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혜택으로 회유하여 **변화 요구를 억제**하는 것은 무의사결정의 수단이다. 이를 통해 지배집단에 불리한 요구의 의제화를 막고 기존 이익을 유지한다.

선지별 해설

무의사결정은 기존 지배집단에 불리한 요구가 정책의제로 등장하거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과정이다.

① X: 공식적인 정책결정에 참여한 행위자만 살피는 다원주의의 한계를 비판한 이론이다. 의제로 채택되지 못한 요구에도 권력이 작용하므로, **의제에서 배제하는 권력**까지 분석해야 한다고 본다.

② O: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기존 혜택을 잃게 하거나 잃을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하고, 새로운 혜택을 제공해 회유·포섭하면 변화 요구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제재와 회유를 통한 요구 억제**는 무의사결정의 수단이다.

③ X: 무의사결정은 편익·특권의 불공정한 배분을 시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변화 요구를 억제해 **기존 편익·특권의 배분을 유지**하는 권력 작용을 설명한다.

④ X: 변화 요구의 표출이나 의제화를 막기 위한 **폭력·강제력 행사**도 무의사결정의 수단에 포함한다. 이는 폭력이 실제로 사용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며, 폭력의 도덕적 정당성을 일반적으로 승인한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10. 정책결정모형 중 앨리슨(Allison)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합리모형(Model Ⅰ)은 표준운영절차(SOP)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② 관료정치모형(Model III)은 행위자 간 목표의 공유가 매우 약하며 타협과 흥정이 지배함을 제시하였다.

③ 조직과정모형(Model Ⅱ)은 국가와 정부가 단일의 의사결정 주체가 아니고 준독립적인 하위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집합체로 인식한다.

④ 1960년대 초 쿠바가 소련의 미사일을 도입하려고 했을 때 미국이 해상봉쇄 정책을 채택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표준운영절차(SOP)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명하는 것은 **조직과정모형(Model Ⅱ)**이다. 합리모형(Model Ⅰ)은 정부를 단일한 합리적 행위자로 보고 목표 달성에 가장 유리한 대안을 선택한다고 설명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표준운영절차(SOP)는 조직이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미리 정해 둔 절차이며, 이를 중시하는 것은 **조직과정모형(Model Ⅱ)**이다. 합리모형(Model Ⅰ)은 국가나 정부를 단일한 합리적 의사결정자로 보고, 대안별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국가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하는 대안을 선택한다고 설명한다.

② O: 관료정치모형(Model III)의 행위자들은 소속 조직의 이해관계와 개인적 목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달라 목표의 공유가 약하다. 따라서 정책은 하나의 일치된 목표에 따른 선택보다 **행위자 간 타협과 흥정의 결과**로 설명된다.

③ O: 조직과정모형(Model Ⅱ)은 정부를 **준독립적인 하위조직들의 느슨한 집합체**로 본다. 각 조직이 담당 영역에서 기존의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행동하므로, 정부 정책은 이들 조직의 활동이 결합되어 나타난 산출물이다.

④ O: 앨리슨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소련 미사일의 쿠바 배치에 대응하여 미국이 해상봉쇄를 선택한 과정을 분석하였다. 같은 정책결정을 합리적 선택, 조직의 절차와 활동, 관료 간 정치적 상호작용이라는 세 모형으로 설명하였다.

NoteBase

문 11.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공동체모형은 구성원 간 권력이 불균등하게 분포된다고 보고 있으나, 이슈네트워크는 권력이 균등하게 분포된다고 주장한다.

② '철의 삼각(iron triangle)'이라고 불리는 하위정부모형은 소수의 엘리트들이 특정 정책결정을 지배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③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이어서 참여자의 접근가능성이 높다.

④ 정책공동체모형은 정책영역별로 전문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의 역할을 강조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정책공동체는 구성원 사이의 **상대적인 권력 균형**을, 이슈네트워크는 자원과 접근 기회의 차이에서 생기는 **권력의 불균등**을 특징으로 한다. 두 모형의 권력 분포를 반대로 설명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X: 정책공동체에서는 구성원들이 각자 보유한 자원을 교환하고 서로 의존하므로 **상대적인 권력 균형**이 유지된다. 모든 구성원의 영향력이나 이익이 완전히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슈네트워크는 참여자의 자원과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접근 기회가 달라 **권력이 불균등**하게 분포한다. 따라서 두 모형의 권력 분포에 관한 설명을 서로 바꾸어야 한다.

② O: 하위정부모형의 철의 삼각은 **의회의 관련 위원회·행정부의 담당 관료·이익집단**이 긴밀하게 결합한 관계이다. 이들은 서로 필요한 자원과 지지를 제공하며 외부인의 접근을 제한하므로, 특정 정책영역에서 소수의 핵심 참여자가 정책결정을 지배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③ O: 이슈네트워크는 특정 정책쟁점에 관심을 가진 관료, 정치인, 이익집단, 전문가, 언론인 등 다양한 참여자가 연결된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관계망**이다. 폐쇄적인 하위정부나 정책공동체보다 새로운 참여자가 접근하기 쉽다. 다만 참여의 개방성이 모든 참여자의 동등한 영향력을 뜻하지는 않는다.

④ O: 정책공동체는 일정한 정책영역에서 공통의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관계망이다. **전문지식과 정보**는 정책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므로, 이를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NoteBase

문 12. 로위(T. Lowi)의 정책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미국식 다원론자들의 주장과 엘리트주의자들의 주장을 통합하려는 의도에서 정책을 분류하였다.

② “정치가 정책을 결정한다(politics determines policies)”라고 하였다.

③ 1972년 논문에서 강제력의 행사방법(직접 또는 간접)과 적용대상(개별적 행위 또는 행위의 환경)이라는 두 가지 분류기준을 제시하였다.

④ 1964년 논문에서 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으나, 1972년에 구성정책을 추가하였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정치가 정책을 결정한다’는 설명은 인과관계를 뒤바꾼 것이다. 로위는 **정책이 정치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선지별 해설

① O: 로위는 다원론과 엘리트론을 모든 정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정책영역에 따라 서로 다른 권력구조**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정책유형별로 정치과정의 차이를 설명하여 두 이론의 상반된 관찰을 통합하려 했다.

② X: 로위의 주장은 **‘정책이 정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참여, 갈등·협상 방식이 달라지므로, 정치를 원인으로 놓은 선지는 그의 주장을 반대로 설명한다.

③ O: 1972년에는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적용대상**을 교차하여 정책을 분류했다. 강제력이 직접적으로 행사되는지 간접적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개별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지 행위가 이루어지는 환경에 작용하는지가 두 기준이다.

④ O: 1964년에는 배분정책·규제정책·재분배정책의 세 범주를 제시했으며, 1972년에는 **구성정책**을 추가해 네 범주로 구분했다. 구성정책은 정부조직의 신설·개편처럼 정치체제의 기본 틀과 운영 구조를 정하는 정책이다.

NoteBase

문 13. 파출소와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과 같은 일선관료(Street-Level Bureaucrat)에 대한 립스키(M. Lipsky)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무의 자율성이 광범위하고 집행과정 중 의사결정에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② 불확실한 상황과 복잡한 문제를 대처하는 적응 메커니즘으로 단순화(simplification)와 정형화(routines)가 활용된다.

③ 시간·정보·자원의 부족은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일선관료의 업무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④ 서비스 대상자인 모든 시민들을 고정관념 없이 불편부당하게 대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립스키는 일선관료가 과중한 업무와 자원 부족에 적응하면서 대상자를 **고정관념에 따라 범주화하고 차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모든 시민을 항상 불편부당하게 대한다는 설명은 이러한 현실 분석과 맞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일선관료는 시민을 직접 상대하면서 개별 상황에 맞게 정책을 집행한다. 규정만으로 모든 현장 상황을 미리 정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집행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과 상당한 직무 자율성을 가진다.

② O: 일선관료는 복잡한 사례를 일정한 범주로 묶는 '단순화'와 반복되는 업무를 관행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정형화'를 활용한다. 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과 처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업무환경에 대한 적응 방식**이다.

③ O: 일선관료는 상황과 요구가 다양한 사람을 상대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업무의 불확실성이 높다. 여기에 **시간·정보·자원의 부족**이 겹치면 개별 사례를 충분히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려워져 업무환경이 더욱 악화된다.

④ X: 립스키는 일선관료가 업무 부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대상자를 **고정관념에 따라 범주화하고 차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모든 시민을 고정관념 없이 불편부당하게 대한다는 진술은 그의 현실 분석과 맞지 않는다. 공평한 대우는 요구되는 규범이지만, 실제 서비스 제공에서는 단순화·정형화로 인해 개별 사정이 무시되거나 편향이 생길 수 있다.

NoteBase

문 14.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가 분석한 오클랜드(Oakland) 사업의 정책집행 실패 이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적절한 정책수단의 선택

② 리더십의 지속성 문제

③ 참여기관과 참여자의 부족

④ 부적절한 집행기관의 선정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오클랜드 사업에서는 **참여기관과 참여자가 너무 많아** 동의와 조정을 거쳐야 할 지점이 늘어났다. 참여자의 부족이 아니라 다수 참여자 사이의 복잡한 조정과 그에 따른 거부·지연이 실패 요인이다.

핵심 풀이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는 소수민족의 취업을 늘리려던 오클랜드 사업을 분석하여 정책수단, 추진체계와 참여자 간 조정이 집행 성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정책수단: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투자를 늘리면 소수민족의 고용도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투자 확대와 대상 집단의 고용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없었다**. 목표 달성에 간접적이고 부적절한 수단을 선택한 것이 실패 요인이다.

리더십: 사업을 주도하던 핵심 인사들의 교체로 **집행을 일관되게 이끌 지속성**이 약해졌다. 초기의 추진 의지와 협조 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참여기관과 참여자: 참여자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기관과 사람이 관여**했다. 각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의사결정점이 많아져 의견 조정이 복잡해지고, 거부나 지연이 발생할 기회가 늘어났다. 이를 공동행동의 복잡성으로 설명한다.

집행기관: 목표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기관을 선정하면 집행 과정에서 정책의 의도가 왜곡되고 목표와 어긋나는 수단이 선택된다. 오클랜드 사업에서도 이러한 집행기관 선정의 문제가 실패 요인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실패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참여기관과 참여자의 부족'을 제시한 ③이다.

NoteBase

문 15. 정책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진실험(true-experiment)은 무작위 배정(random assignment)을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내적 타당성이 높은 설계이다.

② 준실험(quasi-experiment)은 무작위 배정에 의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등화를 꾀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설계이다.

③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연구자가 인과관계 추정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진실험 설계에 해당한다.

④ 사회실험(social experiment)은 자연과학의 실험실 실험(laboratory experiment)에서 사용되는 절차에 기초를 두고 있어 대체로 외적 타당성이 낮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자연실험은 연구자가 처치 대상을 무작위로 배정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나 제도 변화 등을 이용하여 인과관계를 추정한다. 따라서 **진실험이 아니라 준실험적 방법**으로 이해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진실험은 대상자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작위로 배정**하여 정책 시행 전 두 집단의 특성이 평균적으로 비슷해지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집단 간 기존 차이의 영향을 줄이므로, 관찰된 결과의 차이를 정책의 효과로 판단하는 내적 타당성이 높아진다.

② O: 준실험은 현실적·윤리적 제약 등으로 **무작위 배정을 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설계이다. 이미 형성된 집단을 비교하거나 정책 시행 전후의 변화를 분석하여 효과를 추정한다. 무작위 배정으로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하므로 기존 집단 차이와 외부 사건의 영향을 별도로 통제해야 한다.

③ X: 자연실험은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처치를 배정하는 대신, 자연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나 제도 변화로 생긴 집단 간 차이 등을 인과관계 추정에 활용한다. 자연발생적 현상을 이용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이를 **무작위 배정에 기초한 진실험으로 분류한 부분**이 잘못이다. 자연실험은 준실험적 평가방법으로 이해한다.

④ O: 사회실험은 자연과학의 실험에서 사용하는 처치와 통제, 결과 비교의 논리를 사회정책 평가에 적용한다. 그러나 제한된 대상과 실험 조건에서 얻은 결과가 다른 지역·대상·시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실험 상황의 인위성이나 대상의 대표성 부족으로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인 외적 타당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한계를 설명한 것이다.

NoteBase

문 16. 정책변동의 유형과 그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 - 야간통행금지의 철폐

② 정책유지(policy maintenance) - 저소득 자녀에 대한 교육비 보조를 직상위계층 자녀로 확대

③ 정책승계(policy succession) -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이버 수사대 창설

④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 - 과속운전 단속을 교통경찰관에서 감시카메라 설치로 대체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교육비 보조의 기본 목적과 지원 방식은 그대로 두고 **지원 대상만 직상위계층 자녀까지 확대**한 것이므로 정책유지에 해당한다. 정책유지는 기존 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대상 범위나 수혜 수준 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야간통행금지의 철폐는 기존의 통행 제한 정책을 없애는 것이므로 **정책종결**에 해당한다. 정책혁신은 종전에 다루지 않던 정책문제에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② O: 저소득 자녀에게 교육비를 보조하던 정책을 직상위계층 자녀에게까지 확대해도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려는 목적과 보조금 지급이라는 수단은 유지된다. 이처럼 **기존 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정책유지이다. 정책유지는 아무 변화도 없는 상태만을 뜻하지 않는다.

③ X: 사이버 범죄라는 새로운 정책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조직을 창설하는 사례는 **정책혁신**에 해당한다. 정책승계는 기존 정책을 바탕으로 사업이나 수단 등을 대체·재편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를 처음 마련하는 이 사례와 구별된다.

④ X: 과속운전을 단속한다는 목적은 계속 유지하면서 단속 수단을 교통경찰관에서 감시카메라로 대체하므로 **정책승계 중 정책대체**에 해당한다. 정책종결은 대체 정책 없이 기존 정책을 폐지하는 것이므로, 단속 활동이 새로운 수단으로 계속되는 이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7.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리더는 부하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원하고, 제시된 과업목표를 부하가 달성한 정도를 평가해서 연봉·보너스·승진에 반영하고, 저성과자에 대해 예외관리를 한다.

② 리더는 부하와 충분히 소통해서 함께 이루고 싶은 미래 비전에 대한 공감대와 주인의식을 형성하게 해준다.

③ 리더는 부하가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재구성하고 해결책을 구하도록 자극하고 변화를 유도한다.

④ 리더는 부하 한 사람 한 사람의 니즈에 관심을 갖고 그에 맞는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목표 달성 정도에 따른 보상과 저성과자에 대한 예외관리는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이다. 변혁적 리더십은 비전 공유,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등을 통해 구성원의 동기와 역량을 높인다.

선지별 해설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에게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고 가치관과 동기를 변화시키며, 창의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여 기대 이상의 노력을 이끄는 리더십이다.

① X: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목표 달성에 따라 연봉·보너스·승진으로 보상하는 것은 성과와 보상을 교환하는 '거래적 리더십'에 해당한다. 성과에 연계한 보상은 '조건적 보상'이고, 성과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개입하여 바로잡는 것은 '예외관리'이다. 따라서 **조건적 보상과 예외관리**를 중심으로 한 이 설명은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이다.

② O: 함께 추구할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구성원이 그 목표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변혁적 리더십의 '영감적 동기부여'에 해당한다.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유된 비전에 대한 공감과 몰입**을 형성하여 공동 목표를 향한 자발적인 노력을 이끈다.

③ O: 기존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것은 변혁적 리더십의 '지적 자극'이다. 익숙한 가정이나 해결 방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문제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대안을 탐색**하도록 유도한다.

④ O: 구성원마다 다른 욕구와 성장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변혁적 리더십의 '개별적 배려'이다. 획일적으로 대하기보다 **개인의 욕구에 맞는 학습기회와 지도**를 제공하여 각자의 잠재력과 역량이 발달하도록 돕는다.

NoteBase

문 18. 조직구조 유형 중 팀(Team)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층을 축소하여 수평적인 구조를 추구한다.

② 전통적 조직에서는 상명하복과 지시가 일반적이지만, 팀제에서는 상호 충고와 토론을 강조한다.

③ 업무결과에 대한 팀원 개개인의 책임이 강조된다.

④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팀제는 공동 목표를 위해 구성원이 협력하는 조직구조이므로, 업무결과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책임보다 **팀 전체의 공동책임**을 강조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팀제는 여러 관리 계층을 거치는 전통적 구조를 줄이고 **수평적인 구조**를 지향한다. 구성원 간 거리를 좁혀 직접 소통하고 협력하기 쉽게 한다.

② O: 전통적 조직은 상급자의 지시와 하급자의 복종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팀제에서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이 전문지식과 의견을 나누므로 **상호 충고와 토론**이 강조된다.

③ X: 팀제는 구성원이 협력하여 공동의 성과를 만들어 내므로 업무결과에 대한 **팀 전체의 공동책임**을 강조한다. 개인의 담당 업무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개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을 팀제의 특징으로 제시한 것은 부적절하다.

④ O: 팀제는 관리 계층을 줄이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의사결정 권한을 팀에 부여한다. 이에 따라 **보고·결재 단계가 짧아져** 현장의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NoteBase

문 19.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동기부여이론 중 과정이론에 해당된다.

② 기대이론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인은 유의성(Valence), 수단성(Instrumentality), 기대감(Expectancy)이다.

③ '수단성'은 자신의 직무성과와 보상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④ '유의성'은 개인의 행동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행동이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기대감**이다. 유의성은 그 성과로 얻는 **보상에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를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기대이론은 개인이 노력과 성과, 보상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여 행동을 선택하고 노력의 정도를 정하는지 설명하는 **과정이론**이다. 무엇이 욕구를 충족시키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론과 구별된다.

② O: 기대이론의 세 요인은 유의성(Valence), 수단성(Instrumentality), 기대감(Expectancy)이다. 각각 보상에 부여하는 가치, 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뜻하며, 이들을 함께 고려하여 동기부여를 설명한다.

③ O: 수단성은 **성과와 보상의 연결**에 대한 인식이다. 특정한 수준의 직무성과를 달성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④ X: 개인의 행동이나 노력이 일정 수준의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은 **기대감**이다. 유의성은 노력의 성공 가능성이 아니라, 성과에 따른 **보상을 얼마나 바람직하게 여기는지**를 뜻한다.

NoteBase

문 20. 조직군 생태학(Population Ecology of Organ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환경을 주어진 여건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상황이론과 유사한 입장을 취한다.

② 분석의 수준은 개별 조직이다.

③ 조직 형태상에 변이가 발생하면 환경과의 적합 수준에 따라 환경적 적소로부터 선택되거나 도태되어 사라지게 된다.

④ 조직이 구조적 타성에 빠지게 되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어 도태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조직군 생태학의 주된 분석 단위는 개별 조직이 아니라 **유사한 조직들의 집합인 조직군**이다. 환경에 적합한 조직이 살아남고 부적합한 조직이 사라지는 선택 과정을 통해 조직군의 변화를 설명한다.

선지별 해설

조직군 생태학은 환경의 선택을 통해 조직들이 생성·존속·소멸하면서 조직군의 구성이 달라지는 과정을 설명한다.

① O: 조직군 생태학과 상황이론은 모두 환경을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주어진 외부 조건으로 본다. 다만 상황이론은 개별 조직이 환경에 맞게 구조를 조정하는 적응을 강조하고, 조직군 생태학은 **환경이 적합한 조직을 선택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② X: 주된 분석 수준은 개별 조직이 아니라 **유사한 형태의 조직들로 이루어진 조직군**이다. 한 조직의 내부 변화보다 조직군 전체에서 어떤 조직 형태가 늘어나거나 사라지는지를 설명한다.

③ O: 서로 다른 조직 형태가 나타나면 환경이 제공하는 자원과 조건에 얼마나 적합한지에 따라 존속 여부가 달라진다. 조직이 생존할 수 있는 자원과 조건의 영역이 환경적 적소이며, 여기에 적합한 조직은 선택되고 부적합한 조직은 경쟁에서 도태된다.

④ O: 구조적 타성은 기존 시설에 대한 투자, 정착된 업무 관행, 내부 이해관계 등으로 조직이 기존 구조를 쉽게 바꾸지 못하는 성향이다. **환경이 변했는데도 필요한 구조 변화를 하지 못하면** 환경과의 적합성을 잃어 도태되므로, 개별 조직의 자유로운 적응보다 환경에 의한 선택을 중시하게 된다.

NoteBase

문 21.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료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탈관료화 현상의 하나로 등장했다.

② 유기적인 조직으로 평면조직에 가까우며 융통성 있는 조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의 복잡성과 공식화를 특징으로 한다.

④ 매트릭스 조직, 태스크포스, 프로젝트 팀, 네트워크 조직이 여기에 속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애드호크라시는 계층과 고정된 규칙을 줄여 유연하게 운영하는 조직이다. 관료제와 비교해 **낮은 구조적 복잡성과 공식화**를 특징으로 하므로, 이를 모두 높다고 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선지별 해설

① O: 애드호크라시는 엄격한 계층제와 정형화된 절차로 운영되는 관료제의 경직성을 줄이려는 조직 형태이다. 변화하는 과제에 맞추어 조직과 역할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점에서 **탈관료화**의 한 형태이다.

② O: 애드호크라시는 구성원이 상황에 맞추어 협력하는 유기적 조직이다. 계층 수가 적은 평면적 구조에서 **수평적 의사소통과 상호 조정**을 활용하므로 새로운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③ X: 애드호크라시는 계층을 줄이고 고정된 조직 경계를 완화하는 점에서 관료제보다 구조적 복잡성이 낮으며, 업무를 세부 규칙과 절차로 고정하지 않아 **공식화 수준도 낮다**. 여러 분야 전문가의 수평적 전문화가 높을 수 있지만, 이는 계층 수가 많은 수직적 분화와 다른 차원이다. 따라서 높은 복잡성과 공식화를 전형적 특성으로 묶은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O: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별 조직과 과업별 조직을 결합하고, 태스크포스와 프로젝트 팀은 특정 문제나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모은다. 네트워크 조직은 자율적인 조직 단위들을 연결하여 협력한다. 이들은 고정된 계층과 부서 경계를 넘어 **과업에 맞게 협력 관계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탈관료적 조직 형태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2. 개방체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의 엔트로피(positive entropy)

②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③ 항상성(homeostasis)

④ 등종국성(equifinality)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개방체제는 외부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받아들여 쇠퇴·해체의 경향을 억제하는 **부(-)의 엔트로피**를 특징으로 한다. '정(+)의 엔트로피'는 반대로 체제의 질서가 약화되는 경향을 뜻한다.

개념 구분

정(+)의 엔트로피: 체제의 질서가 약화되고 쇠퇴·해체로 향하는 경향을 뜻한다. 개방체제의 대표적인 특성은 외부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받아들여 이러한 경향을 억제하는 **부(-)의 엔트로피**이다.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개방체제는 환경으로부터 자원·정보 등을 투입받고, 이를 전환하여 산출물을 환경에 내보낸다. 산출물에 대한 환류를 받아 활동을 조정하므로 **환경과 지속적으로 교류**한다.

항상성(homeostasis): 환경이나 내부 상태가 변할 때 체제가 스스로 조정하여 **기본적인 특성과 균형을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아무 변화도 없는 정지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교류와 조정을 통해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태적 균형이다.

등종국성(equifinality): **출발 조건과 경로가 달라도 같은 최종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성질이다. 조직이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반드시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개방체제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의 엔트로피'를 제시한 ①이다.

NoteBase

문 23. 갈등관리전략 중 갈등해소전략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문제 해결

② 상위목표 제시

③ 자원의 증대

④ 정보전달 억제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정보전달 억제는 정보의 부족과 불확실성을 높여 갈등을 자극하는 **갈등조성전략**에 해당한다. 갈등해소에는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여 오해를 줄이고 공동의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 적합하다.

개념 구분

갈등해소전략은 대립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협력을 유도하여 갈등을 완화하는 방법이다. 반면 갈등조성전략은 조직의 지나친 안일함이나 침체를 깨기 위해 갈등을 자극하는 방법이다.

문제 해결: 갈등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고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다. **갈등의 원인을 공동으로 해결**하므로 갈등해소전략에 해당한다.

상위목표 제시: 각 집단이 혼자서는 달성하기 어렵고 **서로 협력해야 달성할 수 있는 공동 목표**를 제시한다. 개별 집단의 대립보다 공동 목표의 달성을 중시하게 하여 갈등을 완화한다.

자원의 증대: 예산·인력·시설 등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갈등의 원인인 경우**, 자원의 공급을 늘려 경쟁과 대립을 줄인다. 자원 부족이라는 원인을 완화하는 갈등해소전략이다.

정보전달 억제: 필요한 정보의 흐름을 제한하여 불확실성과 오해를 키우고 갈등을 자극한다. 이는 갈등관리전략의 분류에서 **갈등조성전략**에 속한다.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의사소통을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갈등해소전략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보전달 억제'인 ④이다.

NoteBase

문 24. 통솔범위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통솔범위를 넓히면 계층 수가 늘어나서 고층구조(tall structure)가 된다.

② 통솔범위를 얼마로 정해야 하느냐에 대해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그 수를 제시하고 있다.

③ 사이몬(H. Simon)은 “통솔범위의 수는 마술적인 수”라고 비판하였다.

④ 인간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관은 일정한 수의 부하를 통솔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조직 규모가 같을 때 통솔범위를 넓히면 한 상관이 더 많은 부하를 직접 감독하므로 **계층 수가 줄어 저층구조**가 된다. 고층구조는 통솔범위가 좁을 때 형성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조직 규모가 같을 때 통솔범위를 넓히면 한 상관이 직접 감독하는 부하가 많아지므로 중간 관리계층이 줄어 **저층구조(flat structure)**가 된다. 반대로 통솔범위를 좁히면 같은 인원을 관리하는 데 더 많은 계층이 필요하여 고층구조(tall structure)가 된다.

② O: 적정 통솔범위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서로 다른 수를 제시하였다. 통솔 가능한 부하의 수는 업무의 복잡성, 상관과 부하의 능력, 의사소통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조직에 적용되는 **하나의 수로 고정하기 어렵다**.

③ O: 사이몬은 학자들이 특정한 통솔인원을 제시하지만 **그 수를 선택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선지의 '마술적인 수'는 일정한 숫자가 어떤 조직에서나 최적의 통솔범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비판의 취지이다.

④ O: 통솔범위는 한 상관이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뜻한다. 상관의 시간, 주의력, 정보처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통솔하는 부하의 수를 적정한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NoteBase

문 25. 앨더퍼(C. Alderfer)의 ERG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의 기본 욕구를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② 하위수준의 욕구가 만족되었을 때 차상위 욕구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좌절-퇴행접근법(frustration regression approach)을 부정하고 있다.

④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하여 복합적으로 하나의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ERG이론은 **좌절-퇴행접근법을 인정한다**. 상위 욕구의 충족이 좌절되면 하위 욕구를 더 강하게 추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선지별 해설

① O: 앨더퍼는 기본 욕구를 **존재·관계·성장 욕구**의 세 범주로 구분한다. 존재 욕구는 생존과 물질적 안전을, 관계 욕구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성장 욕구는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욕구를 뜻한다.

② O: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 욕구를 추구하는 **만족-진행**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존재 욕구가 충족되면 관계 욕구에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다만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상위 욕구가 나타난다는 엄격한 전제조건을 두지는 않는다.

③ X: ERG이론은 **좌절-퇴행접근법을 인정한다**. 상위 욕구를 충족하려는 노력이 좌절되면 상대적으로 충족하기 쉬운 하위 욕구에 대한 욕구 강도가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O: ERG이론은 **여러 욕구의 동시 작용**을 인정한다. 하나의 욕구만 순차적으로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보상을 얻으려는 존재 욕구와 능력을 발전시키려는 성장 욕구 등이 함께 작용하여 같은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NoteBase

문 26. 엽관주의(Spoils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로 학벌, 지연, 혈연과 같은 개인적 친분관계를 임용의 기준으로 삼는다.

② 오늘날은 직업공무원으로 하여금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만드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③ 1883년 미국의 팬들턴법(Pendleton Act)을 기회로 엽관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④ 행정의 능률성을 강화시키는 반면 행정의 민주성을 약화시키는 단점이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엽관주의적 임용은 선거로 선택된 정치지도자의 정책 방향을 관료조직에 반영하여 **시민 요구에 대한 행정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 오늘날에는 실적주의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학벌·지연·혈연 등 개인적 친분을 주된 임용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실주의'이다. 두 제도를 구분할 때 엽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나 선거 기여 등 정치적 연고**를 기준으로 공직을 배분한다.

② O: 정치적으로 임명된 상위직 공무원이 선거를 통해 선택된 정책 방향을 관료조직에 전달하고 집행을 이끌면, 직업공무원도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게 된다. 이러한 **민주적 통제와 대응성의 강화**가 오늘날 엽관주의적 요소를 실적주의와 함께 활용하는 이유이다.

③ X: 1883년 미국의 팬들턴법(Pendleton Act)은 공개경쟁시험과 능력에 기초한 공무원 임용을 제도화한 **실적주의 확립의 계기**이다. 엽관주의를 활성화한 법이 아니라 정치적 연고에 따른 인사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법이다.

④ X: 엽관주의는 선거로 형성된 민의를 행정에 반영하여 **민주성과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전문적 능력보다 정치적 연고를 중시하고 정권 교체에 따라 공무원을 교체하면 전문성·계속성이 약해져 행정의 능률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선지는 장점과 단점의 방향을 반대로 설명했다.

NoteBase

문 27. 우리나라 국가공무원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63년 처음 소청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심사기관으로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②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④ 징계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이 명백할 때 이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제기할 수 있다.

정답 4번

①

소청심사제도는 **1963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당시 내각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②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부작위에 불복할 때 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이다.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 ·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는 **처분 행정청을 구속하는 기속력**이 있으므로, 처분 행정청은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15조(결정의 효력) 제14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NoteBase

④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절차적 위법성이 명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청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4.7.27>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NoteBase

문 28. 「국가공무원법」 상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을 3개월간 박탈한다.

② 해임과 파면은 신분박탈형 징계로 일정기간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가 된다.

③ 감봉은 보수의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감봉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한다.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정답 1번

①

강등되어도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며,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그 기간에는 보수 전액을 감한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12.31, 2014.1.7, 2015.12.24>

②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이다. 처분을 받은 때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2018.10.16, 2021.1.12, 2022.12.27, 2023.4.11, 2024.12.31, 2026.4.21>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징계이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08.3.28, 2008.12.31>

NoteBase

④

정직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이다. 이 기간에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되 직무 수행이 정지되고 보수 전액이 감액**된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08.3.28, 2008.12.31, 2015.12.24>

NoteBase

문 29. 공직구조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폐쇄형 충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직위분류제는 개방형 충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급제에서는 보수 체계가 직무급이나 성과급을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직위분류제에서는 생활급이나 연공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③ 계급제 하에서 인적 자원의 이동은 수평적·탄력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직위분류제 하에서는 수평적 이동이 곤란하다.

④ 계급제는 일반행정가를 선호하지만, 직위분류제는 전문행정가를 선호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두 제도의 보수 기준을 서로 바꾸어 서술했다. 계급제는 **생활급·연공급**을, 직위분류제는 **직무급·성과급**을 중심으로 보수를 정한다.

선지별 해설

계급제는 공무원 개인의 자격과 능력 등을 기준으로 사람을 계급별로 구분하는 제도이고,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종류·곤란도·책임도 등을 기준으로 직위를 분류하는 제도이다.

① O: 계급제는 하위 계급에서 채용한 인력을 내부에서 육성하고 승진시켜 상위 직위를 충원하는 **폐쇄형 충원**을 원칙으로 한다. 직위분류제는 각 직위의 직무수행 요건에 맞는 인력을 외부에서도 충원할 수 있는 개방형 충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X: 계급제에서는 개인의 계급과 근속연수 등을 중시하므로 **생활급·연공급**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직위분류제에서는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 업무 실적 등을 중시하므로 **직무급·성과급**이 중심이 된다. 선지는 두 제도의 보수 체계를 반대로 연결했다.

③ O: 계급제는 개인의 계급을 중심으로 인력을 관리하므로 같은 계급에 속하는 여러 직무 사이의 전보 등 **수평적 이동이 비교적 용이**하다. 직위분류제는 개별 직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격을 중시하므로 성격이 다른 직무 사이의 수평적 이동이 어렵고 인력 운용의 탄력성이 낮다.

④ O: 계급제는 여러 업무를 경험하면서 종합적인 판단과 조정을 수행하는 **일반행정가**의 양성에 유리하다. 직위분류제는 특정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고 전문성을 축적하도록 하므로 전문행정가를 선호한다.

따라서 보수 기준을 서로 뒤바꾼 ②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NoteBase

문 30. 우리나라 다면평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360도 평정법, 집단평정법 등의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② 다면평가의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 관련자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다면평가 결과는 그 평가 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④ 다면평가의 평가자에 피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은 포함되지만, 민원인은 참여할 수 없다.

정답 4번

①

다면평정법은 상급자·동료·하급자 등 여러 관계자가 다양한 방향에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360도 평정법 또는 집단평정법**이라고도 한다.

②

평가자 집단은 **평가 대상자의 실적·능력을 잘 아는 업무 관련자**로 구성하며, 소속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고려하여 **공정한 대표성**을 갖추어야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다면평가)
③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 · 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 관련자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다면평가 결과는 **평가 대상 공무원 본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다면평가)
④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결과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④

다면평가에는 상급·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하위 공무원뿐 아니라 **민원인도 평가자로 참여할 수 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다면평가)
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NoteBase

문 31. 저성과자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저성과자 관리는 조직의 경쟁력 확보, 성과주의 조직문화 구축 및 조직내 부정적 파급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

② 저성과자 관리의 장애요인으로는 저성과자의 모호한 개념 정의, 온정주의 문화, 평가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 등이 있다.

③ 민간부문과 달리 공공부문에서 저성과자가 발생하는 것은 직위분류제라는 인사제도의 특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④ 저성과자 관리체계는 퇴출접근법(outplacement method)과 역량개발접근법(competency development method)이 있는데, 해고는 퇴출접근법의 대표적인 예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공공부문의 저성과 문제와 관련된 제도적 특성은 **직업공무원제의 강한 신분보장과 폐쇄적 임용**이다.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내용과 책임을 기준으로 직위를 분류하는 제도이므로, 이를 공공부문 저성과 문제의 특수한 제도적 배경으로 제시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O: 저성과를 방치하면 조직의 생산성이 낮아지고, 다른 구성원의 업무 부담과 불만이 커져 성과를 내려는 동기까지 약해질 수 있다. 저성과자 관리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의 확산을 줄이고** 구성원의 성과 개선을 유도하므로 조직 경쟁력과 성과주의 조직문화 형성에 필요하다.

② O: 저성과자의 기준이 모호하면 관리 대상자를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어렵다. 온정주의 문화는 낮은 성과를 드러내거나 불리한 평가를 하는 것을 꺼리게 하며,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면 구성원이 평가 결과와 후속 조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들은 모두 **대상자 선정과 관리 조치의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장애요인이다.

③ X: 직위분류제를 **직업공무원제**로 고쳐야 한다. 직업공무원제는 공직을 생애에 걸친 직업으로 삼도록 강한 신분보장과 내부 승진 중심의 폐쇄적 임용을 중시한다. 이러한 특성은 인력 교체와 외부 경쟁을 제한하여 저성과 문제가 지속되는 제도적 배경이 될 수 있다. 반면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종류·난이도·책임을 기준으로 직위를 분류하고 직무에 맞는 인력을 배치하는 제도이다.

④ O: 퇴출접근법은 저성과자를 조직에서 떠나게 하는 방식이므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해고가 대표적인 예이다. 역량개발접근법은 교육훈련·코칭 등을 통해 부족한 직무수행능력을 보완하여 성과를 높이는 방식이다. 두 접근법은 **퇴출에 중점을 두는지, 재교육과 성과 개선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구별된다.

NoteBase

문 32. 우리나라 예산심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이 이루어진다.

② 정부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면 50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이루어진다.

③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답 3번

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국회법 제84조(예산안 · 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②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0명으로 구성**된다.

국회법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국회법 제84조(예산안 · 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NoteBase

③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 중인 예산안의 일부를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하려면,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35조(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의 국회 제출기한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이다.

국가재정법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NoteBase

문 33. 품목별예산제도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부 통제 예산제도로 행정부의 자의적 예산 집행을 통제할 수 있다.

② 지출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며 지출대상에 따라 책임성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③ 의회의 예산심의 및 회계검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④ 예산 배분 및 회계가 기능 및 활동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 활동의 성과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대상별 투입과 집행 통제**에 초점을 둔다. 기능·활동별로 예산과 업무를 연결하여 성과를 파악하기 쉬운 것은 **성과주의예산제도**의 특징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품목별예산제도는 인건비·여비·물품비 등 지출대상별로 예산을 세분하는 통제 중심의 제도이다. 의회가 지출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승인하므로 **행정부의 자의적인 지출을 제한**하는 데 유리하다.

② O: 승인된 지출 항목과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도록 하므로, 정해진 용도와 다른 임의 지출을 통제한다. 항목별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예산을 정해진 대로 집행했는지에 대한 회계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

③ O: 무엇을 구입하는 데 얼마를 지출하는지가 항목별로 제시되므로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기 쉽다. 집행 후에도 **승인된 예산과 실제 지출을 대조**하기 쉬워 회계검사에 유리하다.

④ X: 기능·사업·활동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수행한 업무와 비용을 연결하고 성과를 파악하는 것은 **성과주의예산제도**의 특징이다.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대상인 투입요소별로 예산을 편성하므로 무엇에 얼마를 썼는지는 알기 쉽지만, 그 지출로 어떤 사업을 수행하여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과 파악의 용이성을 품목별예산제도의 장점으로 볼 수 없다.

NoteBase

문 34.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84년 호주 정부가 처음 채택하였다.

② 성 중립적(gender neutral) 또는 몰성적(gender blind)인 제도이다.

③ 「국가재정법」 제26조에 의하면,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뿐 아니라 기금에도 적용된다.

정답 2번

①

호주 정부는 **1984/85년도 예산에서 정부 지출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최초의 여성예산보고서로 발표하였다. 예산의 성별 영향을 분석·보고한 이 시행이 성인지 예산제도의 최초 도입에 해당한다.

②

성인지 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고려**하는 제도이다. 성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성중립적·몰성적 접근과 구별된다.

③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예산에 대한 성인지 예산서와 함께 **기금에 대해서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35.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지출 용도에 제한이 없는 일반재원이다.

③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루어진다.

④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교부하는 특정재원이다.

정답 2번

①

보통교부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에 **그 차액인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지방교부세법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 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 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개정 2026.3.5>

②

보통·특별교부세의 공통 재원은 **보통교부세 97%, 특별교부세 3%**로 배분한다. 특별교부세에는 **사용 조건이나 용도 제한을 붙일 수 있으므로** 지출 용도가 자유로운 일반재원으로 볼 수 없다.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4.12.31>
1. 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97
2. 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3

지방교부세법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3.7, 2013.3.23, 2014.1.1, 2014.11.19, 2014.12.31, 2017.7.26>

NoteBase

③

부동산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재원**으로 하며, 관련 정산액을 반영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6. 12. 22., 1978. 12. 5., 1981. 12. 31., 1984. 8. 7., 1989. 12. 30., 1993. 12. 31., 1994. 3. 24., 1995. 12. 6., 1996. 12. 30., 1998. 12. 28., 1999. 8. 31., 2000. 12. 29., 2002. 12. 18., 2003. 12. 30., 2005. 1. 5., 2006. 12. 30., 2007. 7. 19., 2007. 12. 31., 2009. 1. 30., 2010. 1. 1., 2010. 3. 31., 2011. 12. 31., 2013. 1. 1., 2018. 12. 31., 2020. 6. 9., 2020. 12. 22., 2021. 12. 21.>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라.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9. 12. 10.>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 2014. 12. 23., 2014. 12. 31.>
4. 부동산교부세: 제1항제2호의 금액 + 제1항제5호의 정산액

④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안전 분야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정해진 특정재원**이다. 소방 인력 운용, 소방·안전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등을 지원한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2.10, 2024.12.31>
1.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NoteBase

문 36.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 과정은 예산 편성, 심의·의결, 집행, 결산 등 전 과정을 포함한다.

③ 2011년 9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제도로 전환되었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수렴된 주민 의견서를 예산안에 첨부해야 한다.

정답 2번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평가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5.13, 2017.7.26, 2018.3.27>

②

주민은 예산 편성·집행·결산 등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과 결산 승인 등 의결사항은 제외**된다.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2018.3.27, 2021.1.12>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2. 예산의 심의 · 확정
3. 결산의 승인

NoteBase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8.3.27>

NoteBase

문 3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퇴직 후 취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충돌의 위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② 취업을 인정하되 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반 시 확인하여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③ 취업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은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취업 불가 또는 취업이 허용되는 민간기업을 선정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④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다.

정답 4번

①

퇴직 후 재취업을 매개로 재직 중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거나 퇴직 후 전직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해충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제도이다.

②

취업을 허용하고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활동만 제한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덜 제한**한다. 다만 로비나 정보 이용은 외부에 드러나기 어려워 **위반행위의 적발·입증과 제재가 어렵다**.

③

취업 자체를 막으려면 **과거 직무와 취업예정 기업 간 관련성 및 제한 대상 기업의 범위**를 미리 정해야 한다. 직무와 기업의 활동이 다양해 그 경계를 일관되게 설정하기 어렵다.

NoteBase

④

취업제한 기간은 **퇴직일부터 3년**이고, 업무관련성 판단 대상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이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2.30, 2019.12.3, 2025.8.14>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8. 안전 감독 업무, 인 · 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9.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 ·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 · 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10.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나.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11. 기본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 ·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 · 단체

NoteBase

가.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 · 단체
나.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 ·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 · 단체
다. 건축 · 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 · 단체

NoteBase

문 38.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준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②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③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④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정답 1번

①

장성급 장교의 재산공개 기준은 **중장 이상**이다. 준장 이상 전체를 공개 대상으로 보는 것은 법정 범위보다 넓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공보를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1.7.29, 2012.12.11, 2015.12.29, 2017.3.21, 2020.12.15, 2020.12.22, 2023.12.26, 2026.8.4>
6.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④

경찰공무원의 계급에 따른 재산공개 기준은 **치안감 이상**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공보를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1.7.29, 2012.12.11, 2015.12.29, 2017.3.21, 2020.12.15, 2020.12.22, 2023.12.26, 2026.8.4>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의 시 · 도경찰청장

NoteBase

문 39. 우리나라의 적극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적극행정은 행정적 재량권을 가진 관료들을 전제로 논의되는 개념이다.

③ 감사기관은 사전컨설팅을 통해 감사대상기관의 적극행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사전컨설팅에서 제시된 의견대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경우 징계 등에 대한 면책을 받는다.

정답 4번

①

적극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이다.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도 이에 포함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25>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적극행정은 공무원에게 업무 처리에 관한 판단·선택의 여지가 있음을 전제로, **행정적 재량을 공익 실현을 위해 능동적으로 행사**하도록 요구하는 개념이다.

③

감사기관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으로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업무 처리 방향에 관한 의견을 사전에 제시하는 사전컨설팅**으로 적극행정을 지원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의견 제시 요청)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 · 허가 · 등록 · 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사원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NoteBase

④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했더라도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사전컨설팅에 따른 면책요건 충족 추정과 징계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징계 등 면제)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NoteBase

문 40.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제외)을 소환할 투표권을 갖는다.

②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19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주민투표권을 갖는다.

③ 시·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그 주민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라도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정답 3번

①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주민**은 주민소환투표권을 갖는다. 소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된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투표권이 없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주민소환투표권)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1.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지방자치법 제25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NoteBase

②

투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에 **계속 거주할 자격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선거권 결격사유가 없는 한 주민투표권이 있다. 선지의 19세 이상 외국인도 이 연령 요건에 포함된다.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개정 2009.2.12, 2016.5.29, 2022.4.26>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2.12>

③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주민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하더라도 이 제외사유는 적용된다.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 · 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 · 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 ·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NoteBase